■ 공정위 동향 ■

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발표

[분야별 핵심과제]

3대 분야	6대 핵심과제
공정경제 포용기반	① 공정거래 기반위에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
	②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
혁신경쟁 활력제고	③ 신산업, 성장산업의 혁신생태계 구현
	④ 민생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 활력 제고
생활체감 자율변화	⑤ 디지털 경제 시대의 맞춤형 소비자정책 추진
	⑥ 자율적인 공정거래·상생문화 조성

1. '갑을관계' 규제

2020년에도, 갑을관계 해결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는 지속될 전망입니다.

- 중형 조선·건설사, PB 상품 하도급 거래, 전속거래 분야를 중점 조사하고, 서면실태조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.
-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등 온라인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
-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장려금, 물류비 등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, 대리점 분야의 실태조사 대상 업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('19년 3개→'20년 6개).

2. '기업집단 내부거래' 규제

대기업집단은 물론, 중소기업집단의 내부거래까지 규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

- **중견기업집단의 의식주 분야 및 원자재 시장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감시할** 예정입니다.
- 비계열 중소기업으로의 일감 나누기 실적 등을 **지수화하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할** 계획입니다.
- **물류, SI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「(가칭)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」을 마련할** 계획입니다.
- **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, 지주회사 지분요건 상향, 순환출자·금융보험사·공익법인 의결권제한 강화 등 법 개정**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

3. '신사업·성장산업' 규제

플랫폼 산업, 디지털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규제 방향이 정비될 것입니다.

- **플랫폼 분야의 단독행위 심사지침이** 제정될 예정입니다.
- 플랫폼, 디지털 미디어, 데이터 경제 등 **디지털 경제 분야의 불공정행위의 감시 및 경쟁정책 이슈 발굴, 분석을 위해 ICT 특별전담팀이** 가동됩니다.
- 최근 문제된 배달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 M&A에 대해서는 동태적 효율성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균형있게 심사할 예정입니다.

4. '민생분야' 경쟁촉진

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감시는 강화되고, 중소기업·소상공인을 위한 규제는 완화됩니다.

- 국민 안전과 건강(수도·철도장비, 의료기기), 일상생활(통신, 식품, 물류 등), 취약계층 피해를 유발(농업용자재, 구인·구직서비스 플랫폼 등)하는 3개 분야의 카르텔을 집중 감시합니다.
- 중소기업·소상공인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및 하도급법 적용면제 사업자 기준을 상향하고, 심사 불개시/경고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.

5. ‘디지털 경제 시대’의 소비자정책

디지털 거래에서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므로, 전면적인 약관검토가 필요합니다.

- 구독·공유 경제 분야에서 계약해지, 환불 등 소비자 대상 불공정약관을 검토하여 시정할 계획입니다.
- 신유형 상품·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, 표준약관과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.
- 온라인 중고거래중개, SNS 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됩니다.

6. 자율적 공정거래·상생문화

자발적, 자율적인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인센티브가 강화됩니다.

- 업종별 맞춤형 표준계약서 도입을 확대하고, 표준계약서 사용 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.
- 공정거래협약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상생협력을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.
- 공정거래법규 자율준수(CP)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.
- 소비자중심경영(CCM) 인증 우수기업 포상을 확대하고 관련 심사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.